

5.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후보공천과정

양길현

(제주대 평화연구소장)

〈국문 요약〉

김태환이 제주도 전역에서 골고루 득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조직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은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작-간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김태환의 조직능력에 있었다. 특히 김태환은 2006년 5.31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미 2004년 재보선과 2005년 주민투표를 치른 경험과 조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1번씩 제주도 전역에 걸쳐 자신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간 김태환의 조직화는 기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식 당 조직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5.31 제주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돌풍을 넘어 무소속 김태환이 당선된 것은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의 무소속 선호를 보여 주었다. 제주도민의 무소속 선호는 본질적으로는 중앙정치를 활용하려는 친여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무소속의 외형을 띠는 '제주도민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제주도민은 도지사 후보지명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한나라당의 부패에 실망하여 냉소적으로 무소속 후보를 뽑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5.31제주지방선거, 김태환, 조직동원능력, 무소속선호, '제주도민당'

1.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필자의 위치

필자는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이하 진철훈)의 정책자문단장으로 직접 선거에 참여했다. 정책자문단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진철훈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의 경위와 취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써야 하다 더 의미 있고 새독가 넘치는 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다른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 후보와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김진호·김성수(2006, 174)의 지적처럼, 다른 지역의 주민들로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주도민들은 후보자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동감하면서도 후보자 선택의 결정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에 필자도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자 정책비교보다는 오히려 후보자 선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후보 공천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선거에서 후보공천 과정은 전용주(2006, 83)의 지적처럼 “정당 내부의 권력투쟁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후보공천 과정의 특성은 바로 그 정당의 권력관계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정당 권력관계의 변화는 후보공천 과정의 변화를 유도하며, 역으로 후보공천 과정의 주요한 특성 변화는 정당의 권력구조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되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의해 처음 실시된 상향식 공천제는 이전 3김시대의 비민주적인 정당구조를 바꿀 수 있는 후보공천 과정으로서 널리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6년 5.31 제주지방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후보공천 과정은 “상향식 공천보다는 당선가능성을 고려한 여론조사라는 방법의 동원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대권주자를 포함한 정당 지도부 혹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강화”(전용주 2006, 84)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상향식 공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파행을 거친 온 5.31 지방선거의 우여곡절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담아내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필자는 2005년 여름부터 근 1년간 작-간접적으로 5.31 제주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들 간에 벌어졌던 각축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 공천이야말로 길고 긴 선거과정의 백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력 정당의 후보로 공천되는 것은 당선권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본격적으로 링 위에서 온 몸을 바쳐 싸울 선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2005년 여름부터 양영식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이차 양영식)의 전

책참모로서 선거에 참여하면서 직면하게 된 첫 번째 과제는 양영식이 과연 열린우리당 후보가 될 수 있느냐였다. 물론 양영식뿐만 아니라 2006년 말까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과 같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김태환 한나라당 예비후보(이하 김태환)-현명관 한나라당 예비후보(현명관)-진철훈-송재호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이하 송재호)에게도 제일 먼저 부딪치는 초미의 과제였다.

유력 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와 관련하여 각 정당은 당선 가능성과 당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면을 중시하느냐의 논쟁과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각각의 기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또 각각의 예비후보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장·단점이 교차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물론이고 각 후보자마다 길고 긴 각축을 벌였다. 2006년 5월 17-18일간 후보 등록을 마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이전에 각 후들은 유력 정당의 후보로 선정되어야 소위 '메달권 선수'의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실제로 유력정당의 후보는 금-은-동의 메달 가운데 하나는 받게 되어 있어, 선거 때가 되면 유력 정당이 출마 후보자에 대해 갖는 위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렇다고 유력정당의 지도부가 후보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유력 정당의 후보로 선정되기까지는 각 정당 지도부의 판세분석과 현장 민심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각 예비후보들의 지지도가 중요한 리렛대가 된다.²⁾ 다만 이번 5.31 선거에서는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대권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의 대권구도에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얼마나 유용한 가라는 전략적 고려도 광역자치단체 후보자 선정에 크게 작용하였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보다는 열린우리당이 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생각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

1) 민주당은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를 영입하여 공천하였지만 “지지도가 2%대에 머물며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지자” 중도에서 사퇴하였고(제주의소리, 2006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후보자를 내 놓지 않았다.

2)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진철훈-현명관-김태환 3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

히는 게 좋을 듯싶다. 더욱이 필자는 이번 5.31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의 도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고 또 2005년 여름 이후 양영식의 정책참모로서 선거에 참여하다가 2006년 3월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합의에 의해 진철훈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진철훈의 정책자문단장을 맡았다. 그래서 혹 필자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사후 설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크게 염두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혀야 하겠다. 필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학자적 비판의식에 입각하여 합리적 추론을 하려고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5.31 선거와 관련하여 필자가 참여한 시기에 맞춰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의 5개월에 걸친 선거과정 중 양대 유력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인터넷신문인 <제주의소리>의 기사를 주로 참조하면서 필자가 직접 참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또 추론할 수 있는 점들을 담아내고 있다. 필자가 주로 <제주의소리>의 기사를 인용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의소리>의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의소리>가 지방 수준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4대 인터넷신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2) 5.31 제주선거 총평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크게 4가지 차원의 선거를 통해 정치적 역동성이 전개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 의회권력을 가늠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권력의 상징인 광역자치단체 선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지방의회 선거가 그것이다. 이 글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가운데 특히 지방권력의 상징인 도지사의 선거에 즈음하여 김태환-현명관-진철훈 3인의 후보자가 벌인 복잡한 각축 과정을 세밀하게 참여 관찰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어디까지나 바둑으로 치면 복기에 해당하는 사후적 설명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27일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를 통해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위상을 부여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를 폐지해 버렸다.³⁾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의 지방선거는 제주도지사과 제주도의회의원만을 뽑는 것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과 도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만큼이나 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지사를 둘러싸고 경쟁이 집중되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행정시장과 서귀포행정시장인 경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당락이 두 행정시장의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도지사 후보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통상 선거는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을 일차적 토대로 하여 주요 정당의 지지기반을 십분 활용해야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시작의 반'은 따 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각축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경우는 영-호남 지역과 다르게 지역정당의 영향이 약한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 차이가 1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누구나라는 인물론이 당락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도지사 예비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일차적으로는 유력정당의 후보자가 되는 것이 첫째 관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인물됨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두 번째 관문이며 마지막으로 정책이 라든가 선거운동 등과 같은 선거과정이 세 번째 관문이 된다. 이렇게 유

3) 필자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함으로써 민주성을 훼손한 대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와 같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민에 의해 아래로부터 호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다 노무현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관료적 이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다른 특징에 보편적으로 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력정당의 후보가 된다는 게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2006년 5월 1달 정도 진철훈-현명관-김태환 3자구도에 의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에 이미 최소한 6개월 이상 긴 시간 동안 유력정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한 줄다리기가 각 예비후보자에게는 1라운드의 경기였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처럼 정당에 대한 지역주의적 지지기반이 강한 경우는 누가 지역 내에서 유력한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느냐가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이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이러한 이변은 사실상 공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특정 후보자의 개인적 신상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새로이 드러나 도덕성이나 형사법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후보자의 개인적 신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은 이후 각 후보자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에서 각 후보자마다 장·단점이 있는 인간임을 고려할 때 쓸림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5.31 지방선거에서처럼 한나라당이 압승했다고 하여 이것이 한나라당 후보의 인물됨이 다른 정당 후보의 인물됨보다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님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더욱이 정책이나 선거운동 기법 등에서 어떤 후보자가 절대적 우위를 찾기도 어려운 선거일수록 정당투표가 압도적인 당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당의 지역적 지배구조나 정서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곳이어서 거의 서울의 종로와 같은 정치 1번지로서의 객관적 균형감이 존재하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항상 전국적 선거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표의 흐름을 보여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은 제주도민의 지지도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5.31 선거에서 특히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불어 닥친 ‘박풍’⁴⁾마저도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4) ‘박풍’이란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피습되면서 테러에 대한 반감이 박근혜에 대한 도정포복 분위기가던 현상을 기칭한다. 박근혜 피습은 특별 박근혜

정도로 제주도 유권자의 모범적인 탈중앙정치 내지는 탈지역정치 견지에 서 크게 돋보인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한국정치의 지역정당화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 분석과 전망에서 돋보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제주도민이 지역 정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다른 도에서 제주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원 고향과의 연관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31 선거에 참여하는 41만 2천여 유권자 가운데 많게는 30%, 적게는 10%로 추산되는 호남표심은 그 수가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이들의 표심 잡기가 선거 운동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⁵⁾ 그러나 정도의 차이일 뿐 영남권에서 또는 충청권에서 제주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인 경우도 자신들의 고향과 인연이 있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토착 제주도민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과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투표가 지역정당화를 추종하지 않도록 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전후한 예비후보자들의 입당과 탈당에 대해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이른바 '철새정치인'의 양산해 내기도 한다.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는 2006년 6월 현재 차기 대권주자에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풍은 탄핵정국이 몰아치던 2004년에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영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역전제론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한 바 있어 5.31 선거에서의 박풍은 두 번째의 선거 바람이라고 보겠다. .

- 5) 제주도 유권자 중 호남표심은 1-2세대를 합치면 12만 명에 달하지만 호남표심이라 할 수 있는 1세대는 4만 5천 명 가량 된다.(계주의소리, 2006년 5월 14일)
- 6) 5.31 선거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김태환에 대해 철새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필자가 보건대 김태환은 철새정치인은 아닌 듯싶다. 물론 김태환은 당을 자주 바꿨다. 그러나 2002년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2004년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그리고 2006년 한나라당에서 무소속으로 김태환의 당적 바꾸기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나 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나온 것이지 당선을 위해서 약한 정당에서 강한 정당으로 옮겨 간 해바라기성 당적 옮기기는 아닌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김태환이 2006년 2-4월 무소속과 열린우리당을 놓

서 누가 지역정당의 후보나 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들을 비주류로 생각되는 제주도민의 정서를 누가 더 잘 대변해 주느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남당이나 호남당 또는 충청당과 구별되는 제주도당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정치의 정당구도에서 보면 일종의 지구책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정당보다 '권당'이 더 센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연-혈연-학연 등 다양한 차원의 인간관계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통상적으로 제주도 선거와 관련하여 그리고 5.31 선거에서 김태환의 당선을 두고 그 요인 설명으로 제시되는 '권당정치'에 대해 다른 시각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권당정치'란 정당보다 인간관계가 더 강력하게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좌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김태환의 당선은 소위 부지런히 경조사를 돌보아온 김태환의 밑바닥 조직 다지기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물론 김태환의 경조가 챙기기는 그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를 차치한다면 누구나 놀라워하는 김태환의 특기이다. 그러나 필자는 결코 제주도민들이 경조사 챙기기만으로 표를 몰아줄 만큼 유권자 의식이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김태환의 당선은 평소 경조사 챙기기에 통한 '이익적 유대조직'의 활용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인 동시에 공무원을 통한 조직적인 유권자 동원에서 타 후보보다 앞서 있었기 가능한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김태환은 2004년 6월 5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지사이다.⁸⁾ 남제주군수, 제주도부지사, 제주시장에 재직하면서 제

고 3개월 이상 긴 시간 동안 저울질을 한 것은 철재정치인의 행보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

7) 이현출(2004, 246)은 선거조직을 정신적 유대조직, 이익적 유대조직, 감정적 유대조직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원용할 경우 김태환은 선거 기간 초기에는 한나라당 탈당을 통해 감정적 유대조직을 활용하였고, 선거 중반에는 열린우리당 영입을 타진하면서 열린우리당-호남 등 정신적 유대조직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며, 선거 중반에 최종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확정할 경우에는 경조사 조직과 공무원 동원 등 이익적 유대조직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무소속 당선의 신뢰를 이루어 내었다.

주도 곳곳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해 있던 김태환은 한나라당의 후원에 힘입어 열린우리당의 진철훈을 누르고 당선된 지사이다. 그리곤 2005년 다시 김태환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에서 자신의 조직을 공식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하였다. 더욱이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는 암묵리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혁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조직 다지기가 가능했다. 2004년과 2005년의 조직 다지기에 이어 2006년 다시 선거에 치른 김태환의 조직력은 '박풍'이니 삼성 CEO 신화를 무색케 할 만큼 잘 다져진 조직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김태환의 당선에서 일등공신은 2005년 주민투표 과정에서 재가동되면서도 정비되어 나간 공무원 동원의 조직력이라고 본다.⁸⁾ 제주도의 '권당정치'는 이와 같은 김태환의 조직망을 보다 순조롭게 가동시키도록 한 윤희유에 불과하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 주는 특정 정당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친여의 투표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제주도민들은 탄핵열풍을 수용하여 3인의 국회의원 모두를 열린우리당에게로 당선시켜 주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APEC 제주 유치 공약을 어기고 부산으로 결정하자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제주도민들은 한나라당 김태환을 도지사로 당선시켰다. 이로써 2006년의 시점에서 제주도민들은 한편으로는 친열린우리당을 통해 제주도 발전을 도모하려는 합리적 계산과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친한나라당으로 향하려는 정서적 선택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쏠리지 않도록 불안정한 유동성 속에서 양당에 대해 균형을 취할 수

8) 2005년 6월 5일 제주도지사 재보권선거의 승패요인 분석에서 김진호·김성수(2006, 162)는 김태환의 당선을 “지명도와 조직표의 승리, 정치늬움에 따른 APEC 유치 무산 반감,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실망감, 상대후부(진철훈)의 선거전략 부족, 거대여당 견제론”으로 요약하고 있다.

9) 그러나 2005년 주민투표에서 나타났던 공무원 동원이 2006년 5.31 선거에서 다시 활용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 2006년 6월 현재 김태환 당선자의 그 추이에 대한 수감으로 비롯된다고 이는 관권부변개인이란 보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나 출마자들은 필요하면 유력 정당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민당'을 내세우면서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호소하여 선거를 치를 여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¹⁰⁾ 이는 정당 후보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의 정서만 등에 업으면 무소속 후보로도 당선될 수가 있는 투표 구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31 선거에서 김태환 무소속의 당선은 자신의 우월한 조직망에 기반하여 부분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를 포함한 중앙정치권과 제주도민 간의 대결로 선거구도를 양분화시켜 나간 유용한 득표 전략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제주의소리, 2006년 6월 1일) 중앙정치권과 제주도민당의 양자구도는 사실상 김태환 지지와 김태환을 반대하는 현명관·진철훈 지지로 나누어 김태환에게 유리한 구도로 선거운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유용한 전략이었다. 더욱이 김태환은 자신에 대한 반대표가 현명관에게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 입당 저울질을 통해 반한나라당 표를 자신에게로 끌어 오는 데도 성공을 거두어 나갔다.¹¹⁾ 다시 말해서 김태환의 당선은 현직지사의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한 조직망의 우월한 확충을 토대로 하여 선거 초반에는 한나라당 탈당에 따른 동정표를 통해 지지도를 유지해 나가고 선거 중반에는 무당파의 사표방지 심리 및 한나라당 현명관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고려 하에 당선 가능성 없는 진철훈보다는 차라리 무소속 김태환을 당선시키려 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지지¹²⁾에

10) 지난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제주도민의 정서를 업은 무소속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의 양정규·현경대·변정일이 민자당의 고세진·이기빈·강보성을 누르고 전원 당선된 것은 제주개발특별법을 둘러싼 중앙권력과 제주도민간의 갈등 속에서 민자당에 대항하여 무소속의 제주도민당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11) 이현출(2006, 246)은 흥보전략으로 이미지전략, 이벤트전략, 밴드웨곤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현명관은 삼성CEO라는 이미지전략에 기대는 데 반해 김태환은 1위를 고수하는 여론조사 지지도와 열린우리당 입당 저울질을 통해 무당파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 대해 사표방지 심리와 전략적 지지를 자극하는 이른바 밴드웨곤전략을 통해 선거 중반에도 지지표 울리기에 성공을 거두었다.

12) 5.31 제주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지지와 관련하여 이현출(2006, 252)은 2004년 17개 총선 관공을 선거 분석의 단위인 단 2004년 17개 총선 관공

협입은 것이지 단순한 '권당정치'의 산물인 것만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2006년 5월 31일 특별자치도 선거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 진철훈과 제주도 지방권력을 장악해 온 한나라당의 현명관 그리고 주로 '제주도민당'에 기댄 무소속의 김태환 3파전의 후보간 대결로 치러졌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11만 2,777표(41.1%)를 얻은 한나라당의 현명관과 2만 2,748표(16.5%)를 얻은 열린우리당의 진철훈을 누르고 무소속의 김태환이 11만 7,214표(42.7%)를 얻어 당선되었다.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선거구도에서 제주도에서만 이러한 한나라당-박근혜 열풍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도 이 글의 한 목표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그 대답 중의 하나로 현직 지사의 프리미엄을 활용한 김태환의 조직망 확충 이외에도 유력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미 싹 터 온 정치과정의 연쇄적 상관관계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무소속 김태환의 승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의 실패, 다시 말해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 한나라당의 오만과 열린우리당의 무소신이 무소속 김태환의 승리를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이다.

김태환의 당선은 외형적으로는 '스킨십정치'의 승리로 요약되기도 한다.(제주의소리, 2006년 6월 1일) 한나라당의 강세-박근혜 태풍에도 불구하고 김태환은 민선 제주시장 이후 10년간 다져온 지역기반을 토대로 '박풍'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환의 스킨십정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명관의 입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을 입으리라고 생각되는 김태환 연계망 그룹들뿐만 아니라 현명관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제주도 공무원사회의 의구심도 크게 한 몫 했다. 2005년 가을 선거 초반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추고 있었던 추미애가 낙선한 것은 김태환-현명관 2강대결로 자리잡게 된 5.31 제주선거와 유사하게 탄핵정국으로 인해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양당대결로 전개됨에 호남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에 지지를 몰아주는 전략적 선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함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김태환 도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새로운 인물을 찾고자 하는 데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현직 도지사의 현역 이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파격적 환호를 만들어 내는 데는 삼성CEO인 현명관도 2%의 부족을 면치 못했다. 제주도정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상당수 기대가 현명관과 진철훈으로 나뉘므로써 변화의 돌풍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수록 제주도 공무원들의 현상유지 선호는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김태환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로 나갔다. 5.31 제주선거에서도 제주도의 동서남북 지역구도에 의한 지역주의 투표가 나왔지만 지역투표의 이점이 서로 상쇄됨으로서 특정 지역구도가 선거 결과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골고루 득표를 한 김태환의 당선으로 연결되었다.

김태환이 제주도 전역에서 골고루 득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필자는 무엇보다도 김태환이 가장 효과적인 조직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¹³⁾ 통상 지적되는 '스킨십정치' 내지는 '권당정치'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김태환의 조직을 일컫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김태환의 당선은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직·간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김태환의 조직능력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관측이다. 물론 필자는 김태환이 얼마나 많은 선거자금을 썼는지 그리고 현명관-진철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썼기에 당선되었다는 물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¹⁴⁾ 다만 김태환의 조직 능력에 대한 필자의 높은 평가는 김태환이 5.31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미 2004년 재보선과 2005년 주민투표를 치른 경험과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데 착안

13) 김태환의 조직표는 2006년 5.31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2004년 6.5 재보선 때에도 당지지도가 높은 열린우리당 후보인 진철훈을 누르고 당선시킨 요인이었다. 즉, 2004년 6.5 재보선 때에도 "개인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 김태환 후보의 조직선거가 4.15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라 참신성을 내세운 진철훈 후보의 입물선거를 눌렀다"는 게 김진호·김성수(2006, 176)의 분석이다.

14)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조직이란 지하에서 점 조직화한 정도를 지칭하는 데, 이와 같은 점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권선거의 규모와 정도에 대해서는 후보 당선과 위에는 안 수간 연을 관습과 보

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1번씩 전도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간 김태환의 조직화는 기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식 당 조직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¹⁵⁾ 김태환의 사조직이 최대 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자금이 윤희유가 되었으리라 보는 게 필자의 추론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김태환은 관권선거 수사로 한 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만 관권선거로 수사를 받아온 김태환 진영에 대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수사 발표를 미룸으로써 김태환은 가까스로 선거전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김태환의 관권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은 유력한 경쟁자인 현명관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과 묘하게 맞물려 큰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는 만약 현명관이 깨끗한 CEO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김태환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현명관의 이미지가 제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지사로 포장되어 널리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데 비해 에버랜드 편법전환사채와 관련한 불법-타락의 이미지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의 유권자들도 많았다. 전국적으로 5.31 지방 선거가 일반적으로 깨끗한 무능보다는 유능한 부패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31 제주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나섰지만 그게 여의치 않자 안정과 변화 가운데 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갔다. 한나라당 현명관이 한나라당 후보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보수적 안정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CEO론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미지의 불합치는 무언가 현명관의 불법적인 과거 행로와 결부되어 안정감을 갖다 주지 못했다.

김태환과 현명관을 비교할 때 김태환은 현명관에 준비된 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태환이 재보선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주도면밀하게 선거 준비를 해 왔음을 뜻한다. 이에 비해 현명관이 제주도지사에 출마

15) 이에 비해 필자가 만나 본 현명관-진철훈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모두 제주도당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기 위해 언제부터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현명관은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제주를 위해서 봉사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아 무방하다. 선거는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고, 전쟁은 공격자가 최소한 2배 이상의 전력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직 김태환 지사에 대한 현명관의 공격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전력을 준비하여 도전해야 한다. 김태환 지사가 2년 준비했다면, 현명관도 최소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다. 예를 들면 현명관은 선거 1년 전에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이를 2-3년 전에 맡아서 270억 이상의 부자로서 거금의 발전기금을 제주대학교에 쾌척한다든가 아니면 하인스 워드처럼 제주도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재단을 조성하였다든가 혹은 제주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 대표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세계적 연구기관을 제주도에 세웠다면 김태환을 이겼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부족한 현명관의 2% 부족은 진철훈의 견제와 맞물려 김태환의 이슬이슬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 글은 5.31 제주선거에서 3파전으로 치러지기까지 진철훈-현명관-김태환 3자간에 진행되어 온 긴 우여곡절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그려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사람의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이를 통해서 1)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간의 관계, 2)지방정치, 특히 제주정치의 특수성, 3)국회의원과 도지사간의 관계, 4)선거에서 소지역주의 문제, 5)선거에서 당 정체성의 문제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이 바둑이 끝난 후의 복기에 가까움에 불구하고 정치학적으로 의의를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II. 3자 구도의 정립 과정

5.31 제주선거는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과제를 다시금 검토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은 폴뿌리 민주주의란 무엇을 뜻하는 가

의 쟁점을 전면에서 부상시켰기 때문이다. 통상 지방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아래로부터 추천·합의되는 후보자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적인 절차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후보자들인 경우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도록 해야 지역의 현장에 밀착한 후보들이 풀뿌리 민생을 토대로 하여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5.31선거에서 도지사의 정당 후보에 대한 공천권은 전체 후보자 가운데 1/3은 중앙당이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전략 공천권을 둘러싸고 중앙당의 공천 권한과 예비후보자들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하여 나갔다.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오만과 특히 열린우리당의 무소신은 중앙정치에 대한 정치불신을 초래하면서 무소속 김태환의 당선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게 이 글의 요지이다.

(1)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공천과정

정당 후보 공천을 둘러싼 최초의 각축은 현명관의 정당 후보 저울질로부터 시작되었다. 현명관은 CEO 대망론을 등에 업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일정한 기간 동안 양면 작전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가 제주도지사 후보로 현명관을 영입하려고 일정하게 공을 들인 만큼이나 현명관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높여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현명관이 두 당을 저울질 하면서 손쉽게 정치적 주가를 높이는 과정은 의도치 않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을 치러야 했다. 하나는, 양식 있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현명관의 정치적 저울질은 정치적 신념의 부재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현명관의 인물됨에 대한 실망 내지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현명관이 유력 정당 모두로부터 파격적인 영입 제의를 받게 되는 만큼이나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 오만에 빠지게 됨으로

써 표를 얻는 데 절대 필요한 겸손의 미덕을 너무 일찍 잃어버리게 되었다.

2006년 1월 내내 현명관을 영입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물밑 작업과 이러한 각축 속에서 어느 정당을 택하는 게 유리한지 또는 어느 정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권을 확보해 줄 것인지를 놓고 탐색을 벌이는 현명관의 정치적 행보가 최대 이슈가 되었다. 이로써 5.31 제주선거에서 이 시기 동안 현명관의 몸값은 상한가를 이루고 있었다.¹⁶⁾ 왜냐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가 CEO 영입에 공을 들이는 만큼이나 현명관의 상품은 최대치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2005-6년의 한국 현실에서 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쟁점이 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한국 제1의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CEO를 지낸 현명관은 경제살리기의 정책공약을 대변하고 실천해 줄 간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실제로 현명관은 김태환-진철훈이 행정관료 출신임을 빗대어 자신은 행정지사나 정치지사가 아닌 경제지사이며, “어떻게 하면 제주를 잘 수”(제주의소리, 2006년 5월 17일) 있도록 하느냐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모든 선거운동을 끌고 나갔다. 그러나 현명관은 삼성 CEO 이미지와는 어긋나게 실제의 정책공약에서는 남다른 비교우위를 차지하지 못해 지지도 상승을 밀고 나가지 못했다.¹⁷⁾ 예를 들면 <삼다수 증산 5조원 수익> 정책공약과 관련 김태환이 일백억원 대의 현행 삼다수 수익에 비추어 볼 때 “급조한 공약” 이거나 아니면 500억을 잘 못 계산한 “계산상의 착오”인 것으로 비판을 하는 데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17일) 그리고 현명관이 줄 곧 자

16) 특히 2006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중의 한사람인 송재호가 현명관의 열린우리당 입당을 촉구하면서 당내 기득권 포기를 밝힌 데 이어 진철훈까지도 현명관의 입당에 양해를 보이는 행보를 보이면서 현명관 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한 구애도 극치를 이루었다.(제주의소리, 2006년 1월 25일)

17) 물론 현명관은 지속적인 공약 발표를 통해 도민의 이목을 끌었고 또 산지천 문화관광벨트화같은 공약 등 호평을 받은 정책공약이 적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삼성 CEO로서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공약으로 비교우위를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고수해 오던 <항공료 50% 인하> 공약도 경실련에 의해 “자치단체장 권한 밖 공약으로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선심성 헛공약인 것으로 선정됨으로써 실현 가능성 문제가 줄곧 도마위에 올려졌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29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현명관의 상품성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도 유용했다. 열린우리당이 현명관을 영입하고자 하는 내부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 되었다. 첫째는, 2005-6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CEO를 영입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이미지 쇄신과 차기 대선 구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한나라당 김태환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열린우리당의 진철훈-양영식-송재호 3인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는 10%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셋째, 현명관은 제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적 인연이 있기에 충분히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호흡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낙관적 판단을 하였다.

2006년 1월 제주도지사 후보 선정을 둘러싼 공방전은 현명관에 대한 한나라당의 관심도 열린우리당 못지않았기 때문에 더욱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한나라당이 30%대의 높은 지지도를 누리고 있는 현직의 김태환 지사를 옆에 두고도 현명관을 영입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 왜 현명관을 영입하려고 하는 지의 의문은 더욱 더 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현명관의 상품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 CEO를 영입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경제 살리기의 구원투수로 나서고자 하는 한나라당에게도 크게 요망되는 것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보다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방자치 선거가 단순히 지방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관심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장기 포석에서 볼 때 제주도 출신 중에 성공한 기업가로서 정평이 나 있는 현명관을 공천하는 게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유용한 것으로 선호되었다. 이 점은 2006년 5월 19일 현명관의 출정식에 참여한 박근혜의 다음과 같은 지지 발언에서 가장 간명하게 요약되어 있다. 즉, “현명관 후보는 저(박근혜)와 한나라당이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며 “현후보를 선택해 세계 속의 제주도를 만들고, 내년에는 열린우리당을 심판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가 그것이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19일) 둘째, 한나라당 현직지사인 김태환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지도부가 김태환의 충성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도 김태환을 대신할 카드로서 현명관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5.31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초점 관심은 한나라당이 왜 현직 지사로서 여론조사에서 30%대의 1위 지지를 받고 있는 김태환을 밀어내고 대신 현명관을 영입했을까이다. 첫째, 한나라당이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김태환의 지지도 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자체 분석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의 김태환 도정의 업적 평가와 관련하여 제주도민들 사이에는 김태환 도정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21세기 제주도의 화끈한 미래가 가능할까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재보선 이후 김태환의 도정 수행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비전 무, 결단 무, 대책 무’(제민일보, 2005년 9월 12일)인 것으로 회자되는 등 김태환의 특별자치도지사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주도민 사회에 팽배하여 있는 분위기에서 한나라당보다도 지지도가 낮은 열린우리당이 혹 현명관을 영입할 경우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김태환이 질지도 모른다는 패배의식이 김태환 버리기를 더욱 부채질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인 분석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현명관을 영입하고자 한 것 자체가 김태환보다 현명관이 더 득표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자체 판단이 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호남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의 승리가 엿보이는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 2007년도 대선 고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장기포석까지 짊어질 만큼 한나라당은 5.31 선거에서 낙관적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도 현명관의 상품성에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덧붙이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현명관 영입 이후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열린우리당의 김태환 살리기의 2라운드 경기를 통해 김태환은 1위 지지도를 끝까지 지켜 나갔다.

둘째, 한나라당이 김태환을 멀리하게 된 데에는 김태환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1위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김태환을 버리고 대안을 찾도록 할 만큼 한나라당이 김태환을 불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태환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의 제주시장으로 재직 중 우근민 전지사가 중도하차 하자 열린우리당의 진철훈에 대한 대항마로 한나라당이 영입하여 당선된 지사였다.¹⁸⁾ 그러나 김태환이 2004년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것은 당 정체성에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열린우리당은 후보 경선을 요구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도지사 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확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 정체성과 무관한 김태환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올인하였고, 이에 한나라당은 김태환의 당 정체성과 충성도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¹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줄다리기를 하던 현명관은 2006년 1월 27일 결국 한나라당을 택했다. 한나라당 입당변을 “제가 가진 능력과 경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라고 밝힌 현명관의 최종 결심으로 2006년 1월 1달 내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입당을 동시에

18) 2004년 6월 5일 재보선에서 김태환은 8만 5,542표(44.0%)를 얻은 열린우리당의 진철훈에 대해 10만 8,853표(56.0%)를 얻어 당선되었다.(제주의소리, 2004년 6월 5일)

19)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논쟁이 많았던 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태환의 공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 기간 중 진철훈이 김태환을 향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반만 맞는 얘기이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29일)

저울질 해 온 정치 행보는 일단계 막을 내렸다.(제주의소리, 2006년 1월 27일) 현명관의 한나라당 입당에는 김태환의 탈당 등 반발을 무릅쓸 만큼의 중앙당의 대폭적 지지는 물론이고 현경대-양정규 전의원 등 제주도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도 한 몫 했다.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원칙주의자 입장인 강창일 의원이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현명관의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자동적인 당공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견지한 것도 현명관의 열린우리당 입당을 주저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물론 현명관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김태환-강상주-현명관 3파전의 경선을 치르기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송재호-양영식-진철훈-현명관 4파전의 경선을 치르는 게 더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현명관은 보다 어려운 길을 택했다. 여기에는 박근혜의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본다, 2006년 1월 25일 현명관의 입당을 촉구하는 송재호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다음날인 1월 26일 현명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이하 박근혜)를 만나고 와서 한나라당 입당을 발표했기 때문에 박근혜로부터 전략공천과 관련한 모종의 언약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거라는 추론이 더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²⁰⁾ 물론 열린우리당의 김혁규 인재발굴영입단장 등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현명관은 영입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는 현명관에게 박근혜처럼 강력하게 모종의 언약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책임자가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대외적 이미지상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박근혜와 같은 당 헤게모니를 보유한 의사결정자가 부재한 열린우리당은 확정적 당 공천을 바라는 현명관의 여망에 부응하기가 한나라당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06년 1월 27일 한나라당 중앙당이 현명관의 입당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김태환 버리기나 다름없는 정치적 공언이었다. 한나라당 후보공천 내규에 따라 김태환-강상주-현명관 간의 경선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경선의 실현 가능성이나 공정성 모두에서 회의적인

20) 2006년 1월 26일 현명관의 박근혜 면담은 현명관을 열린우리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나라당의 모종의 언약을 토대로 하여 열린우리당의 구애를 더 이상 끌여가기에 부당히 되고 있었던 현명관의 마음 전기를 완전히 단편시켰다고 보인다.

상황이 조성되었다. 왜냐하면 현명관의 한나라당 입당은 중앙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게이으로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예비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은 곳, 그리고 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보다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하여 영입한 후보(인재영입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정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 2006년 1월 28일) 현명관 영입은 전략 공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현명관 영입이 전략 공천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건대 한나라당 김태환과 열린우리당 현명관 양자구도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과 한나라당 현명관-무소속 김태환-열린우리당 진철훈 3파전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가능성을 비교할 때 한나라당은 3파전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이다. 현명관의 상품성을 중시한 한나라당이 3파전에 더 기대를 걸었다면, 열린우리당은 초기에는 현명관 영입을 통한 2파전에 기대를 걸다가 현명관의 한나라당 입당 이후에는 3파전에 승부를 걸었고 그 이후 진철훈의 지지도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자 김태환 영입을 통한 현명관-김태환 2파전으로 선회하다가 5.5 단식파동 이후에는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3파전에 응하는 오락가락을 보여 주었다.

김태환의 입장에서 보면 현직 지사를 두고 유망한 후보를 영입하는 것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핑이나 디름없는 것이었다. 혹은 한나라당의 현명관 영입을 두고 유권자 지지도가 높은 김태환-진철훈-현명관 석장의 카드 중 유리한 두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것이어서 비유적으로 ‘꽃놀이패’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제주의소리, 2006년 1월 31일) 그러나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던 한나라당은 패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김태환과 현명관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꽃놀이패가 아닌 패착임이 입증된 것이다. 아니면 필자가 5.31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파전이든 3파전이든 구조적으로 패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사후적 설명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다만 필자의 주장은 사전에 한나라당이 패하도록 되어 있다는 무모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김태환-열린우리당 현명관 간의 2파전보다 유리하다고 본 한나라당 현명

관·무소속 김태환-열린우리당 진철훈 간의 3파전에서도 한나라당이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현명관의 상품성에 몰두한 나머지 한나라당 후보로서의 김태환과 무소속 후보로서의 김태환이 전혀 다른 상품성을 갖고 있음을 한나라당이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선거구도가 3파전일 경우 유권자의 사표심리 방지와 같은 전략적 선택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선거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임을 일깨워 준다고 보겠다.

한나라당이 현명관을 영입하는 것은 사실상 김태환을 버린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중의 하나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한나라당이 김태환보다 현명관을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보았거나 아니면 김태환이든 현명관이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본 정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김태환의 당선은 한나라당의 정세판단이 잘 못 되었음을 뜻하며, 실제로 5.31 선거 이후 한나라당 도의원 당선자들은 한나라당의 패인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제주도당 지도부에 대해 책임을 무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²¹⁾ 필자가 보기에 한나라당의 오판은 한나라당의 현명관 영입을 둘러싼 1라운드 경기 이후 열린 우리당이 김태환 살리기에 나선 2라운드 경기가 남아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2006년 1월의 시점에서 볼 때 여론조사에서 1위의 지지도를 누리고 있는 현직지사가 그 이유야 어떻든 한나라당으로부터 팽을 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탈당하는 것은 자연스런 정치과정이다. 김태환이 한나라당 탈당과 함께 불출마까지 고민하는 정치적 제스처는 일면 도민들로부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거둔 정치적 행보였지만, 어떻든 이때처럼 특정 당과의 정체성을 중시하지 않은 채 지내온 김태환의 정치역정에 시련을 갖다 준 때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 상당히 환멸을 느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인이든 아니면 단순히

21) 고동수 등 7인의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2006년 6월 14일 “5.3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보면서 여기에는 양정규-현경대-변정일 등 제주도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계은퇴를 촉구하였다.(제주소식, 2006년 6월 14일)

행정가로 자처하던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태환에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불출마가 아니라 어떻게든 출마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것이다.

(2)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공천과정=김태환 무소속 후보화 과정

한나라당은 후보경선 내규에 따라 강상주 서귀포시장(이하 강상주)과 현명관 간의 경선이 남아있었지만²²⁾ 김태환이 탈당하는 순간 더욱 더 한나라당 후보로는 현명관이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현명관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자 이제 정치적 관심은 김태환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로 쏠리게 되었다. 현명관을 사이에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살바싸움이 한나라당 승리로 끝나면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초반 정세는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현명관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거둔 한나라당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현명관의 지지도가 상승하여 종반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론조사에서 10%나 앞서는 한나라당 지지도와 현명관 삼성 CEO의 신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제주도정의 변화를 찾는 도민들의 흐름이라는 3박자에서 볼 때 이러한 기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김태환은 한나라당의 밀어내기와 열린우리당의 영입작업으로 인해 현명관에 이어 3달 이상 지속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무소속의 김태환은 방향은 다르지만 효능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쪽으로 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점점 더 강력한 제1의 당선가능한 후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선 한나라당의 김태환 밀어내기는 한나라당 중앙당의 횡포와 오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팽을 당한 김태환에 대해 동정론을 불러일

22)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 12일 현명관은 강상주와의 경선에서 223표 차로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다만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강상주가 41.98%를 얻은 현명관보다 더 많은 58.08%를 얻음으로써 현명관은 “민심에서 패하고 당심에서 승한 반쪽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았다.(제주의소리, 2006년 4월 12일) 물론 현명관은 도민 여론조사에서 강상주 지지표에 반현명관의 진철훈-김태환 지지자가 합쳐져 강상주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반박을 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경선과 같은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연설테오 마는 장치가 없이 조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정치에서 동정이야말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환각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나라당의 김태환 밀어내기는 중앙 정치에 늘려온 제주도민의 소외를 한 데 모아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 한나라당의 김태환 밀어내기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제를 살리는 데 삼성 CEO가 적합하다는 민생적 고려보다는 한나라당의 대권구도에는 현명관 영입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환은 한나라당 탈당과 함께 불출마의 가능성을 내걸면서 지지자들의 결집과 도민의 동정적 관심을 극대화 시켜 나갔다. 2006년 1월 27일 현명관의 한나라당 입당 이후 어려운 행보를 거듭해 온 김태환은 2006년 2월 15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는 이어 2006년 2월 23일 무소속 또는 정당 입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 했다. 김태환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조성된 동정론이 결국 김태환의 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시들어 가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김태환 구하기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문화상 영입단장이 김태환의 영입을 위해 나선 것이었다.

현명관 영입에 실패한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현명관의 잠재적 득표력에 대항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김태환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었다. 더욱이 사실상 한나라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김태환으로서는 어떻게든 당선되어야 출당의 치욕을 벗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당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기가 어려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김태환으로서는 무소속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당선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이제 와서 새삼 정당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는 데 대해서도 마다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김태환으로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 통과라는 정치적 시련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과 호흡을 맞추어 온 밀착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데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동영 의장은 김태환의 고교 후배이기에 정서적으로 마음이 훨씬 편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다만 열린우리당 내에는 2년 전 재보선 때 이미 정당을

달리하여 한 판을 붙은 바 있고 또 그 이후 꾸준히 제주도지사 후보 준비를 해 온 진철훈 예비후보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지가 변수였다. 결국 진철훈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채 2달여간 추진해 온 열린우리당의 김태환 영입 작업은 진철훈의 단식투쟁의 열기에 기가 꺾여 중도에서 그만두고 만다.

여기서 의문은 왜 열린우리당이 진철훈의 단식에 굴복하고 김태환 영입을 포기했을까이다. 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김태환 영입 문제를 “너무 오래 끌음”으로써 “타이밍을 놓쳤다”는 부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²³⁾ 그렇다고 김태환과 진철훈 간에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방식을 내거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5일) 물론 외형적으로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는 “조사단의 확인 결과 진철훈 후보측이 제기한 문제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김태환의 입당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5일)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내건 김태환-진철훈 경선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로서는 진철훈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도덕성 문제가 정치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려져서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전국화 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급거 진철훈 밀어내기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결국 김태환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진철훈이 제기한 김태환의 도덕성,

23) 김태환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 이유는 김태환 역시 열린우리당이 진철훈의 반발을 잠재워서 자신을 전략공천해 주길 바라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김태환이 입당하면 진철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4) 열린우리당이 내건 김태환-진철훈 경선이 공정한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진철훈의 반박과 비난 및 반발은 2006년 4월 29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가 의도적으로 4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기간당원이 아닌 자의 피선거권’ 인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언제든 김태환 지사의 입당을 허용해 주었다는 데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4일) 이 점에서도 열린우리당은 4월 30일 이전에 김태환 영입 문제를 포함하여 후보 경선 문제를 단결지지 무척은 우유부단과 무능력음 보여 주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초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가 진철훈이 강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자 검찰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데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 된다.²⁵⁾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진철훈을 버리고 김태환을 영입하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는 단순히 김태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넘어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 '원칙주의=개혁주의와 승리주의=실용주의' 간의 치열한 각축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태환의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보다도 열린우리당 중앙당 내부의 노선 투쟁을 완곡하게 드러내 보이게 할 만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내부에도 김우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김태환 영입파의 승리주의 노선과 강창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철훈 옹립파의 원칙주의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선 투쟁이 자리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도의원 후보를 포함하여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내부의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2006년 3월 진철훈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의 예비후보로 단일화되기 이전부터 싹터 나온 것으로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내재하면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었다.

5.31 선거 1년 전인 2005년 여름 이후 사실상 도지사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의 김태환 지사와 강상주 서귀포시장, 정당 영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전 삼성물산 회장 현명관이 있고, 그리고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제주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패했다가 권토중래를 피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인 진철훈, 전 통일부 차관인 양영식, 제주대 교수인 송재호 3인이 당 공천을 노리고 뛰고 있었다. 이들 6인의 예

25) 진철훈이 제기한 김태환의 공무원 선거개입 건은 초기에는 선거 기간 중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처럼 얘기되다가 결국 선거 이후로 미루어짐으로써 5.31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2006년 5월 17일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가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건 외에 압수수색한 문건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에 대해 신규로 공무원을 소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주의소리, 2006년 5월 17일) 2006년 5월 24일에는 "선거 판세가 복잡하고 미묘해 팩트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이르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제주의소리, 2006년 5월 124일), 검찰의 수사 결과는 5.31 선거 이후로 미루어진다.

비후보에 대해 몇 차례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1위로는 현직 지사인 한나라당의 김태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에 열린우리당 강창일의 원은 현명관이 한나라당에 입당하자 2006년 1월 31일 한나라당 현명관 무소속 김태환-열린우리당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다는 3자필승론으로 열세인 열린우리당의 가능성을 조직해 나갔다.²⁷⁾ 그리고 3자필승은 송재호-양영식-진철훈 3인의 삼위일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제주의소리, 2006년 1월 31일) 문제는 용호상박으로 대치해 있는 진철훈-양영식-송재호의 경합을 어떻게 하면 각자의 지지기반을 한 데 모아가는 단일화를 갖출 것인가였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을 통해 송재호-양영식-진철훈 간의 혼전이 혹 서로 간에 감정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 재보선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자의 길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 세 예비후보의 역량을 한 데 엮어 열린우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간다면,²⁸⁾ 지금은 3위에 머물고 있는 후보들이지만 승산이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의 <삼위일체를 통한 삼자필승론>이었다.(제주의소리, 2006년 1월 31일)

26) 2005년 9월 13일 제민일보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김태환과 열린우리당 진철훈간의 양자구도일 때 김태환 30.2%, 진철훈 28.1%로 박빙을 보였고, 또 정당 지지도도 한나라당 34%, 열린우리당 29.7%, 민노당 10.2%, 민주당 2.2%로 열린우리당으로는 볼 만한 선거였다.(제주의소리, 2005년 9월 13일)

27) 2005년 9월 14일 아름기획이 당시 거론되는 예비후보자 모두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김태환 36.2%, 열린우리당 진철훈 25.2%, 아직 정당을 정하지 않은 현명관 14.8%, 한나라당 강상주 9.6%, 열린우리당 양영식 7.7%, 열린우리당 송재호 6.5%였고,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40.4%, 열린우리당 35.3%, 민노당 18.5%, 민주당 4.5%였다. 그리고 2005년 9월 14일 MBC는 한나라당 김태환 20.1%, 열린우리당 진철훈 13.9%, 한나라당 현경태 8.0%, 정당을 정하지 않은 현명관 5.2%, 한나라당 강상주 4.4%, 열린우리당 송재호 2.3%, 열린우리당 양영식 1.8%였다.(제주의소리, 2005년 9월 14일)

28)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제주도 지방정부에 도전하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더 더욱 예비후보간의 단합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 2004년 17대 총선시 부산 북·장서(을) 선거를 참여 관찰한 강경태(2006, 193)에 의해서도 '공천과정의 불협화음'이 열린우리당의 패배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더욱 더 정당 예비후보들 간의 단합은 승리의 결정적 요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송재호가 2006년 2월 24일 경선 포기에 이어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자리로 옮기면서 그 실행되지 않았다. 당연히 삼위일체로 선거에 임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는 송재호의 자기 몫 챙기기 또는 차기대망론이 한 몫 했지만, 더욱 크게는 송재호의 좌충 우들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방조한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부족에도 또 한 요인이 있었다. 송재호가 빠짐으로써 삼위일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남은 두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남아 있는 양영식-진철훈 예비후보로서는 양자간의 연합을 통해 3자구도에 임하는 것이었지만, 송재호가 빠진 양자연합의 위력은 크게 손상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김태환 영입 작업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붕괴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철훈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 사퇴 이전에 김태환 영입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양영식-진철훈은 중앙당이 추인을 받아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궁여지책으로 2006년 3월 10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진철훈으로 예비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2006년 3월 13일 진철훈은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 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진철훈의 확고한 출마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씻어내지 못했다.(제주의소리, 2006년 3월 13일) 진철훈의 지지도가 여전히 3위에 머물고 있는 한,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진철훈을 대신하여 김태환을 영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실제적인 추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실제 열린우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태환을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김우남 의원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일부 당직자들에 의해서 물밑에서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²⁹⁾

29) 대표적으로 강창일 제주도당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15 차례에 걸친 대리인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철훈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한편으로는 ‘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당에 단일 후보를 금명간 추천 하겠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제주의소리, 2006년 3월 10일).

진철훈의 지지도가 정체하는 이유는 진철훈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시각이 불안하다는 데에 있다. 필자가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철훈이 죽을 각오를 하고 도지사 선거에 나오겠느냐의 의구심을 거론하였다. 물론 이러한 의구심은 다른 후보 진영으로부터 나온 역선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 무근의 정보가 일정하게 도민들 사이에서 수용되는 것은 그만큼 진철훈이 지사 출마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정치적 행보를 벌였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진철훈이 2년이나 임기가 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다음 선거에 출마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었다.³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어떻게든 제주에서 당선자를 내기 위한 목표 아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김태환의 영입을 추진하게 되는 것도 합리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김태환 역시 현명관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소속보다는 열린우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기대하였다.³¹⁾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김태환간의 물밑작업은 적어도 2006년 4월 11일 진철훈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퇴임하면서 배수진을 치기 이전에 김태환을 영입하여 전략공천하던 아니

30) 진철훈은 결국 2006년 4월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퇴임하여 도지사 출마 의지를 명확하게 재확인해 주었지만, 이와 같은 이사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진철훈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서 일을 잘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2년이나 남은 이사장 자리를 버리고 굳이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어야 하겠느냐의 부정적 평가가 혼재했다.

31)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한 이른바 '5.5파동'은 "당 정체성과 지역정서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유력후보를 끌어당기기에 급급"한 열린우리당과 "무소속과 열린우리당을 몇 차례 오가는 무소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김태환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었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6일) 그 이후 5.31 제주 선거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의 김영훈 제주시장과 김영희 도의원과 이영두 열린우리당 상무위원이 무소속 김태환 캠프로 갔고, 열린우리당의 장기권 남제주군수와 오재윤 사무처장, 허맹사 전 제주시부시장은 현명관 캠프로 가는 등 정치적 지지를 바꾼 많은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 옮기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는 없다는 것은 5.31 선거가 내용

면 아래로부터 합의해 온 진철훈 예비후보를 공식 추인하든 하여 최종 마무리를 해야 했다.

2006년 4월 11일 이후 5월 5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열린우리당이 후보 공천을 놓고 김태환-진철훈간에 벌인 시소게임은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고 말았다. 열린우리당 리더십의 오락가락은 역설적으로 진철훈에게 모종의 이벤트전략 추진을 가능케 한 전화위복의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³²⁾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버텨온 진철훈은 2006년 5월 4일 김태환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가시화되자 결국 단식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었기 때문이다. 5.5 단식투쟁은 한편으로는 1998년 민주당->2002년 무소속->2004년 한나라당->2006년 무소속을 거쳐 다시 열린우리당으로 선거 때마다 당적을 옮기려는 김태환의 행적을 전형적인 철새정치라고 혹평하면서 원칙과 상식에 의거한 “떳떳한 정치문화”를 세우기 위해 김태환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마지막 초강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거에서 단식농성은 정치적으로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었다. 진철훈의 단식은 제주도민으로부터 동정과 호응을 얻으면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으로 하여금 진철훈을 후보로 최종 발표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 내었다. 그러나 김태환 정계은퇴 요구는 김태환이 도지사 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선거캠프를 가동시킴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진철훈으로서는 어떻게든 단식을 풀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김태환을 정계에서 은퇴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단식으로 인해 진철훈에 대한 동정이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열린우리당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자신들의 당선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열린우리당 도의원 후보들로부터 불 멘 소리가 여

32) 그러나 200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의 김태일 후보와 수성(을)의 윤덕홍 후보가 ‘싸늘이만은 막아 달라’며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단식투쟁에서 보듯이 유권자의 의식 혁명을 목표로 삼은 단식투쟁의 이벤트전략이 득표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하세헌 2006, 182) 다만 진철훈의 5.5 단식은 김태환-열린우리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겨냥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유용했던 이벤트 전략으로 평가된다.

기저기서 터져 나온 것도 진철훈에게는 짐이 되었다.³³⁾

진철훈의 단식으로 논쟁의 초점이 된 김태환의 입당 파문은 김태환의 이중적 정치행보와 열린우리당의 원칙 없는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진철훈의 후보감에 대한 회의론 확산³⁴⁾으로 인해 김태환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진철훈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진철훈은 단식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확보하는 성과는 얻었지만 억지와 투정을 부려 공천을 따낸 상처투성이의 후보가 되고 말았다. 5.5 단식파동을 거치면서 진철훈은 무언가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는 데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듯싶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진철훈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경쟁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천 보장을 애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유약성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불안한 후보로의 이미지를 없애지는 못했다.³⁵⁾ 진철훈 대신 김태환을 영입

33) 물론 열린우리당 도의원 출마자들도 크게 2그룹으로 나뉘어서, “김태환지사의 경쟁력을 기대했던 후보군들은 ‘도대체 어찌란 말이나’며 남모를 속앓이”를 하는가 하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후보들은 ‘결국 원칙대로 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진철훈이 정치행보에 피치를 올려 줄 것을 기대”하는 차이를 보였다. (제주소리, 2006년 5월 6일)

34) 2006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영동연 사무총장은 진철훈 예비후보의 경쟁력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진철훈의 공천조기 확정 요구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잘못하면 두 후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말로 김태환의 영입을 위한 진철훈의 동의를 촉구하는 등 김태환-진철훈 단 일화를 압박해 나갔다. (제주소리, 2006년 4월 26일)

35) 열린우리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진철훈의 눈물겨운 순애보는 2006년 4월 29일 진철훈이 스스로 ‘공천확정’을 발표하는 데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철훈의 공천확정 보도는 열린우리당의 부인과 강창일 의원의 ‘사실상 확정’을 거쳐 결국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철훈의 이미지는 더욱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진철훈은 왜 공천 확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었을까? 2006년 4월 29일 경에 이르면 진철훈은 당 공천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1개월도 남지 않은 선거전을 제대로 작동시켜 나갈 조급함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마침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진철훈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정동영의장이 ‘최고위 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원칙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듣고는 이를 ‘긍정적 답변’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소리, 2006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당규에 따르면, 김태환이 4월 30일까지 당에 입당해야 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2006년 4월 27일 정동영의장이 ‘김태환 지사를 전략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006년 4월 28일 김태환이 보도 자료를 통해 ‘무소속 견지’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는 진철훈만이 유일한 대인일 수밖에

하려는 열린우리당의 행보가 결국은 열린우리당이 진철훈의 경쟁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도 줄곧 진철훈보다는 무소속의 김태환을 당선시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하는 무언의 흐름이 계속 존재하였다. 진철훈의 단식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도 뒤늦게 제주지역 정서의 미묘한 흐름을 감지하고는 제주도민에게 사죄하면서 제주역사 이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1조원대의 LNG 발전소를 도지사 당선 없이 건설하겠다고 회유에 나섰지만, 이미 정동영 의장의 오락가락에 실망한 제주도민들을 달래기에는 이와 같은 대형프로젝트도 역부족이었다.³⁶⁾

열린우리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과 비판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림으로써 열린우리당 후보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지도 상승은 크지 않았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정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승리는 요원하게 되었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김태환 지사가 2006년 2월 17일 현명관의 한나라당 입당에 반발하여 탈당한 이후 100여일간 줄곧 김태환 영입을 시도해 왔다. 그러다 진철훈이 단식농성으로 배수진을 치고 이에 놀란 김태환이 무소속 잔류 입장을 보이자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은 김태환에게는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태환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진철훈 후보를 공식화하는 이중 플레이를 서슴치 않았다. 최종적으로 진철훈은 단식을 통해서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은 따 냈지만 이 단식투쟁을 거치면서 망가진 열린우리당의 이미

없는 것으로 성급하지만 일리 있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6) 정동영은 “당의장으로서 APEC 제주유치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함이 있고 그래서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순사업비 8,700억원, 기반시설 포함 1조 2,000억대 대형프로젝트인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공약이 제주도민에게 큰 반향을 주지 못했다.(제주도의소리, 2006년 5월 13일) 이미 APEC과 정부혁신포럼 개최유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제주도민의 불신이 큰 데다 후보 공천을 둘러싼 정동영의 오락가락 행보가 너무 크게 도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뒤늦게 표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LNG 발전소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공약도 진철훈 후보의 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정동영 자신이 발표함으로써 정동영 자신의 지지도 만회에만 급급해 하는 정치적 행보에 머무러 인연은 짝이었다.

지는 향후 진철훈의 지지도 끌어올리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열린우리당의 김태환 영입 작업이 진철훈의 단식으로 그만 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린우리당의 지도력은 취약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취약성은 박근혜에 비해 정동영의 당 장악력이 약한 데에도 그 한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너무 오랫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루어 온 결단력 부족도 한 몫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제주도의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는 진철훈의 단식투쟁을 내다보지 못하고 후보 공천을 미루면서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정세분석 때문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김태환 영입은 4월이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할 정치 일정을 넘김으로써 지도부 자체의 권위와 약속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김태환 영입 작업을 중도에 그만 둘 정도로 우유부단과 무능력을 보여준 만큼이나 제주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을 준비해 온 진철훈의 도지사직 도전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열린우리당은 인재 양성에 소홀히 한 것이었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인재 영입에만 초점을 맞춘 열린우리당이 당원들의 지지를 동원하여 도지사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지의 그 능력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진철훈은 강창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2006년 1월 말부터 근 40여일 이상 예비후보들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예비후보였다.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치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당선과 대선구도에만 집착해 온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역지가 단 며칠간의 단식으로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다. 도지사 후보 공천을 단식한다고 주는 중앙당의 오락가락은 차라리 김태환 영입을 기정사실화 하여 강공으로 밀고 나감만도 못한 최악의 선택이었다. 진철훈에게 그렇게 쉽게 공천을 줄 의향이었다면, 차라리 현명관을 영입하려고 애쓰던 1월경에 후보 공천을 마무리 짓고 그 때부터 뚜벅뚜벅 착실하게 선거운동을 해 나갔으면 훨씬 승산이 있는 3파전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조기에 진철훈 후보의 가시화를 통해 지지기반 확충이 이루어지면 김태환·현명관 두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 선정을 놓고 그리고 제주도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구태를 활용하여 '깨끗하고 젊은' 추진력의 정책으로 차별화를 밀고 나가면 유리한 선거구도가 가능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당 후보는 작게 보고 다른 당 후보는 크게 보면서 쉽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한, 선거에서의 참패는 예정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이 제주도에서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후보 공천에서 보듯이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유력자를 상향적으로 공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관을 했던 사람을 사실상 징발하여 내려 보내는 하향식의 방식에 기대는 한³⁷⁾ 이 또한 선거에서의 승산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한나라당 현직 지사가 유력하게 도사리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후보자를 키워 나가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지기반 강화가 절대 요청된다. 정당이 인재 육성이 아닌 인재 영입으로 손쉽게 이기려는 알팍한 수단에 의존하는 한, 정당의 지지기반 확대는 요원하다. 평소에 유력한 기간 당원을 키우고 이를 후보로 내세우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할 경우 선거에서 이기면 공이 영입된 후보에게 돌아가고 지면 당원들의 저조한 지지 탓으로 돌리기가 쉽기 때문에 당원은 동원된 참여에 머물고 만다. 그 결과는 기간당원들의 주인의식 약화로 귀결되고, 이렇게 당원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한, 선거에서 이기면 그나마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당에 남아 있겠지만, 선거에서 지면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주인이 아닌 동원된 참여로서의 당원은 다른 당을 찾아가는 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지지 하에 치러진 5.31 선거에서 진철훈의 패색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져 갔다. 막판 선거전이 가까워질수록 진철훈의

37) 5.31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 경기지사 진대제 후보, 충남지사 오영교 후보,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 대구시장 이재용 후보, 경남지사 김두관 후보 등 12곳의 지역을 (전국) 11곳에서 11곳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지지도가 20%의 벽을 넘지 못하고 18%대를 오르내림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더욱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상당한 수의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특히 단식파동을 거치면서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으로 진철훈으로부터 멀어져갔고, 결국 5월 31일 최종 득표에서 진철훈은 열린우리당 지지도인 26.6%에 10%에 미달되는 16.6%에 머물고 말았다.³⁸⁾ 단식파동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은 김태환이나 현명관 또는 민노당으로 지지를 바꿨다. 열린우리당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개혁성의 부족에서 찾는 개혁지향적인 입장의 경우는 한나라당에게 표를 줄 수가 없다는 원칙론의 입장에서 민노당으로 지지를 옮기든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선택으로 김태환에게로 표를 이동하였다.(제주의소리, 2006년 6월 1일) 반면 열린우리당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변화의 부족에서 찾는 실용주의적 입장의 경우는 현명관으로 선회했다. 단식파동을 거치면서 김태환과 열린우리당 모두의 무소신과 오락가락은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었고,³⁹⁾ 이로 인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사람은 현명관이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특정의 당을 떠나서 제주도의 미래를 삼성CEO를 통해서 새로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김태환에 비해

38) 5.31 제주선거에서 7명의 비례대표 의원 배정을 위한 정당득표는 한나라당 45.3%(12만 2,713), 열린우리당 26.6%(7만 2,082), 민노당 20.1%(5만 4,330) 그리고 민주당 8.0%(2만 1,790)로 나타났다.

39) 김태환 역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한나라당 탈당 불가불출마·무소속출마·열린우리당 입당·무소속 출마’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제주정가를 혼들어 놓았다. 특히 2006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이 “김태환지사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고 밝히자 김태환은 “특별자치도 완성과 한미 FTA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철세정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며 열린우리당 입당 의사를 밝힌 후 하루 만인 5월 5일 김태환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고 얘기하다가 “열린우리당에서 김지사 입당을 거부했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그렇다면 출가분하게 잘 됐다. 무소속으로 가겠다”며 최종적으로 무소속 잔류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김태환은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탈당 이후 “불출마와 출마, 무소속 잔류와 우리당 입당이라는 뉴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 언론의 초점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가락의 연행으로 불신과 냉소를 극대화 시켜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둘러싼 5.31 선거를 하나의 블랙 코미디로 만들었다(제주의소리, 2006년 5월 6일)

지지도가 처져 있었던 현명관에게로 이동하면서 여론조사 지지도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진철훈의 단식파동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내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진철훈에게 쏟았던 동정과 개혁지지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단식 이후 KBS 여론조사⁴⁰⁾에서 23%의 지지도를 얻었던 반쪽 지지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지지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진철훈의 ‘깨끗함’이 도민들 사이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정치에서 깨끗함은 기본적인 덕성이지만 환호하면서 크게 내세울 업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에 현명관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범법 의혹⁴¹⁾이라든가 관권개입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환⁴²⁾에 비해 분명 진철훈은 큰 약점이 없는 후보였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현명관-김태환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는 진철훈의 깨끗함이 도민들의 지지를 대폭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철훈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이 자리하고 있는 2006년 선거구도에서 안정에는 김태환에게 밀리고 변화에는 현명관에게 밀림으로써 독자적인 브랜드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줄 곧 3위의 득표에 머물고 말았다.

40) 단식 직후인 2006년 5월 9일 제주소라-재민일보-제주 KCTV-제주 CBS가 공동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김태환 24.4%, 현명관 22%, 진철훈 18.8%를 얻어 3자구도가 형성되었고,(제주소라, 2006년 5월 9일) 2006년 3월 10일 KBS 여론조사에서는 김태환 27.6%, 현명관 24.8%, 진철훈 23%로 명실상부한 3자구도가 만들어졌지만,(제주소라, 2006년 5월 10일) 제주도 및 중앙언론은 2006년 5월 9일 제주 MBC의 조사결과인 김태환 29.3%, 현명관 28.3% 그리고 진철훈 16.3%를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 발표함으로써 단식투쟁을 통해서 진철훈이 일궈낸 파이팅 가능성은 여론화되지 못하고 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 점에서 필자는 만약 KBS 여론조사가 먼저 발표되고 다음에 MBC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면, 진철훈의 파이팅이 좀 더 달라졌을 거라는 추론을 해 본다.

41) 현명관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그룹 비서실장을 지냈던 책임자로 도지사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검찰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제주소라, 2006년 5월 26일)

42) 2006년 4월 27일 제주지검은 도지사 공관, 도지사 정책특보실, 기획관실 등 5곳에 대해 영자옥 받부 받고 안스스새우 변역다.(제주소라, 2006년 4월 27일)

3. 결론: 5.31 제주선거에 대한 논평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 역시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질 경우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전용주 2006, 75-76) 1995년 지방선거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고 2002 지방선거는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2006년 지방선거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된 채 선거가 치러졌다. 1995년-2002년-2006년 지방선거 모두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인해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변화 요구를 등에 업고 중간평가 쉽게 선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는 역으로 지방선거의 당선 여부는 지역주의 외에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몫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2006년 3월 여론조사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1.8%이고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20% 안팎 정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패배가 예견되고 있었다.(전영주 2006, 76) 그러나 2006년 5.31 선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어 열린우리당의 대참패로 나타남으로써, 2006년 지방선거가 단순히 노무현정부의 실정 내지는 개혁실패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노무현대통령의 임기말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레임덕 현상이 지방선거에도 반영되었다는 점과 열린우리당 내에는 박근혜와 같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어서 부분적인 바람 물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부분적으로는 지역주의 투표에 기반을 하면서도 집권정부-여당인 노무현대통령-열린우리당의 무능과 오락가락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인해 예상외의 당선 성과를 올렸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탄핵열풍으로 얻어 낸 지지표가 2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상대 정당에게로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다. 5.31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기준이 인물보다 정당에 치우치는 한,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은 호남에서의 민주당을 제외

하고는 한나라당으로 모아졌다. 이 가운데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무소속이 당선됨으로써 5.31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제1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5.31 제주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돌풍을 넘어 무소속 김태환이 당선된 것은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의 무소속 선호 내지는 본질적으로는 중앙정치를 활용하려는 친여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무소속의 외형을 띠는 제주도민당의 위력을 재확인해 주었다.⁴³⁾ 그러나 필자는 이번 5.31 선거를 포함하여 제주도 선거를 단순히 제주도민의 무소속 선호로 치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력정당의 후보 공천을 포함한 정치과정의 파행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무소속 후보를 뽑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후보 공천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도를 감안하여 적시에 이뤄졌다면, 열린우리당 후보 진철훈의 득표율이 16%대에 머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열린우리당의 우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또 한나라당 우세의 전국적 구도로 본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소속의 당선을 폄하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필자의 논점은 유력정당이 여론조사 지지도를 감안하면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후보자를 공천한다면, 유력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50% 이상이었다고 보는 필자의 개인적 판세분석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2006년 5.31 제주선거의 구도는 1)2006년 1월 경의 한나라당 김태환-열린우리당 현명관 2파전 구도, 2)2006년 3-4월 경의 한나라당 현명관-열린우리당 김태환 2파전 구도, 3)그리고 2006년 5월 5일 전후 시기의 한나라당 현명관-열린우리당 김태환-무소속 진철훈 3파전 구도와 4)같은 시기의 한나라당 현명관-열린우리당 진철훈-무소속 김태환 3파전 구도라는 4가지 대결구도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 중에서 4번째 구도로 정립하게 되었는데, 이 글은 4번째 구도가 정립하기까지의 우여곡절 속에서 김태환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방향으로 유력정당, 특히 열린우리당의 후보공천 과정이 어떻게 파행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

43) 제주도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무소속 당선과 관련하여 이를 제주도민의 친여성향으로 설명하고있는 양길현 2005 참조.

점을 맞추었다. 필자는 김태환의 당선은 열린우리당에 의해 초래된 정치과정으로부터 가장 큰 덕을 보았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언제나 유력정당에 의해 정치과정이 파행을 거치게 된다면, 그 결과 유력정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의 당선이 가능하다는 게 제주정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자다.

김태환의 승리는 현역 지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조직력의 승리이다. 김태환의 도정 수행능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태환은 오래 동안 다져온 경조사 챙기기를 통해 현명관이나 진철훈 그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두었다. 김태환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스킨십에 따른 호의를 넘어서서 상호 주고 받는 관계망을 통해 탄탄히 구성된 것이었다. 더욱이 김태환은 2004년 재보선과 2005년 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조직망을 점검하고 가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합법적으로 관권개입의 이점을 누리면서 수행된 2005년의 주민투표 시행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신임투표처럼 진행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2005년 주민투표에서 다진 조직망은 그대로 2006년 5.31 선거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많은 유권자의 동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무소속 김태환은 통상 여와 야를 포함한 중앙정치와 제주도민을 대립시킨 양자 구도 하에서 지역기반에 바탕을 둔 '스킨십정치'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5.31 제주선거에서 제주도민이 반발을 하는 중앙정치란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한나라당의 부패를 통칭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5.31 선거에서는 무능보다 부패에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31 선거의 메시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언제나 깨끗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나오면 그에 게로 표가 몰릴 수 있음을 예시해 주고 있다. 문제는 깨끗하고 유능한 리더십은 흔치 않다는 데에 2007년 대선을 앞에 둔 한국정치의 고민이 존재한다. 전국적 선거 결과와는 다르게 5.31 제주선거는 1%라는 제주도세의 한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실험에 즈음하여 깨끗한 리더십과 유능한 리더십에 덧붙여 중앙정치의 활용이라는 세 번째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중앙정치의 활용은 각 예비후보자들이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선호하는 중앙정치에 대한 이중성에

도 그대로 배어난다. 즉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과정에서는 중앙정치
의 흐름에 편승하여 제주도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로 움직이지만, 원칙
과 상식에 어긋날 때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친여 무소속을 통해 중앙정
치를 활용하는 간접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중앙정치의 지
원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제주도민의 여권지향성이 5.31
제주선거에는 덜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5.31 선거에서 제
주도민에게 여권이란 조만간 개편될 한시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5.31 선거 이후 1년 반이 지나면 비주류의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주류인 야당 한나라당 가운데 어느 당이 향후 집권여당이 될
지의 판단과 계산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2006년 5월의 선거 막판
국면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의 5.31 선거 이후 정계개편 발언은 유
력정당의 하나인 열린우리당의 영향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면서 진철훈으
로부터 김태환에게로 표의 이동을 가져 왔다고 본다.⁴⁴⁾

5.31 선거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진철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은
여당 후보와 함께 해야 더 추진력이 클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
나라당의 현명관은 삼성CEO 경력을 활용한 자신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중시했다. 이에 반해 무소속의 김태환은 중앙정치의 활용을 크
게 내세우지 않았지만 어차피 5.31 선거 이후 새로 짜일 정치판에서 여
권으로 향할 것임이 추론되는 한, 제주도민들에게는 김태환 역시 무소속
이지만 친여를 통해 제주도민의 중앙정치 활용을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비춰졌다. 결국 김태환은 실제적 내용에서는 제주도민의 중
앙정치 활용에 일조를 할 친여 무소속이었고,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는
중앙정치와 대립하면서도 중국에는 중앙정치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제주도 지방정치의 애환을 담아 승리를 거두었다고 본다.

44) 5.31 선거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한 정동영 의장의 발언은 이미 2004년 2월
17대 총선에 즈음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형제”(〈연합뉴스〉, 2004년 2월
21일)라며 선거 국면에서 호남 유권자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과는 달리 지방선거
이후의 정치일정을 내세운 발언으로 2004년 17대 총선 시 노인평화 발언보다도
더 실책의 발언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계개편 가능성은 선거가 진행
중인 와중에서 열린우리당의 존재 여부까지도 정치적 논의 대상에 집어넣음으로
써 유권자의 정당정체성 유지에 치명적 혼란을 가려다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부록> 5.31 제주선거 여론조사 지지도

5.31 제주선거 여론조사 지지도

연도	발표일시	조사주관기관	김태환	현명관	진철훈
2005	9.14	MBC	20.1	5.2	13.9
	11.21	제민일보	37.7	8.9	15.2
	12.27	동아일보	36.7	9.5	20.1
	12.31	제주일보	36.4	9.6	18.3
	12.31	제주타임스	18.9	3.2	6.5
	12.31	조선일보	34.8	6.4	12.3
2006	1.27	제주일보	44.7	9.5	13.6
	1.28	한라일보	31.1	10.9	12.8
	1.30	SBS	33.5	9.5	11.2
	2.26	KBS	48.1	18.6	16.5
	4.15	KBS	29.0	22.0	19.0
	4.20	한라일보	34.3	26.3	16.5
	4.26	MBC	33.8	22.7	21.3
	4.30	제주타임스	21.4	16.9	7.6
	4.30	KBS	35.8	19.6	13.7
	5.3	KBS·제주일보	37.4	26.5	18.9
	5.4	동아일보	35.9	24.5	17.1
	5.9	제주의소리	24.4	22.0	18.8
	5.9	MBC	29.3	28.3	16.3
	5.9	시사저널	36.1	25.8	19.4
	5.10	KBS	27.6	24.8	23.0
	5.14	경향	30.6	25.0	15.2
	5.16	해럴드경제	28.7	34.4	19.9
	5.16	제주의소리	28.6	26.2	19.7
	5.17	MBC	30.8	26.2	21.3
	5.18	SBS·KBS	34.1	28.2	19.3
	5.21	한겨레	31.4	22.4	16.2
	5.22	한라·조선일보	35.0	26.7	16.2
	5.22	한국일보	32.4	30.8	16.9
	5.23	동아일보	31.3	29.7	19.6
	5.23	MBC	32.7	28.9	16.6
	5.23	제주의소리	32.8	30.6	18.1
	5.23	제주일보·JIBS	36.8	32.6	16.8
5.23	KBS	34.9	32.4	18.6	
5.24	SBS	38.8	30.7	16.4	
5.24	KBS	31.2	31.4	19.0	
5.25	MBC	35.0	33.1	14.6	

〈참고문헌〉

- 김진호·김성수. 2006. “제주도지사 재보궐 선거(2004년 6월 5일)의 실패요인 분석,” 『법과정책』, 제12권 제1호.
- 양길현. 2005.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단상,”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 『지구촌 제주인』 (서울: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연합뉴스』. 2004년 2월 21일.
- 이현출. 2004. “지구당 없는 선거운동: 서울광진(을),”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리포트』. 서울: 푸른길.
- 전용주. 2006. “2006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2006년 4월 6-7일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06년 춘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제민일보』, 2005년 9월 12일.
- 『제주의소리』, 2005년-2006년.
- 하세현. 2004. “지역주의에 대한 허무한 도전: 대구 수성(갑),”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ABSTRACT>

Jeju Provincial Election on May 31, 2006 and the Process of Candidate Nomination

Gil-Hyun Yang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Peace Studies,
Cheju National University)

Tae-Hwan Kim, a governor candidate for Jeju Provincial Election held on May 31, 2006, was re-elected. He obtained support from people of all walks in life throughout the Jeju Island. Tae-Hwan Kim had rich experience going through the gubernatorial by-election

in 2004 and inhabitant's vote in 2005 so that he was able to maintain his organization and make it ready for the provincial election in 2006. Kim's capacity to organize and mobilize his supporters was due to his ability to mobilize campaign funds and circulate them effectively. Thus, Kim's capacity to organize election campaign was much stronger than that of his counterparts who were the candidates of the ruling Uri Party and the opposing Hannara Party, respectively.

Jeju People showed their preferences for independent candidate once again while such a preference was in nature pro-government and kind of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central politics. Jeju People chose Kim's flag of 'Jeju people's party' as the second best because they got disappointed in Uri Party's incapability and Hannara Party's corruption as well as in their limping processes of nominating their candidates.

Key Words: Jeju Provincial Election on May 31, 2006, Tae-Hwan Kim, Capacity to Organize and Mobilize, Preference for Independent Candidate, 'Jeju people's party'